

온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의식개혁의 과제



송 대 희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目 次 ■

1. 올 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되나?
2. 경기회복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체질 개선이다
3. 경제체질개선의 핵심은 국민경제
의식의 변화다
4. 21세기 한국경제에는 새로운 생각
이 필요하다

1. 올 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되나?

가. 회복이냐 위기냐?

한국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최근 우리들에게 더욱 절박한 질문이 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아직도 그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악화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바닥에 깔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연말의 "제2의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악화되고 있는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물론 산업현장의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일반국민의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공적자금 40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정치권이 그간 보여준 행태와는 달리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제2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여야의 정쟁 때문에 경제위기가 재발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여야 모두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위기의 불안의 잠재요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기업 구조조정 등 4대

경제개혁의 마무리를 2001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현대를 비롯한 6대 기업에 회사채 신속인수라는 수단을 통하여 부도위기를 모면케 해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시장에 나들던 자금경색의 긴장감을 풀어주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2001년 3월부터 자금시장에 조금씩 피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심리도 다소 진정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완전히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낙관론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한국경제는 하반기에 회복될 것인가?

나. 낙관론과 비관론의 논점

한국경제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주로 정부측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구조조정 효과의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순환론적 입장에서 분석할지라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하는 주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의 한국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피치 ICBA사의 아태담당 콜튼씨는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는 태국·인도네시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적인 것이며, 한국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고 금년 3월 7일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펀드매니저인 월버 로쓰씨 역시 지금까지 한국의 구조개혁은 대단한 것이었으

며, 거대한 재벌을 시장경제적 방법에 의해 해체되거나 변화시킨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칭찬하며, 한국경제는 건실한 기반위에 있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장래를 어렵게 전망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특히 1월말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일부 국내전문가들은 이것은 '현대 살리기'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경제를 어렵고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해외 전문가들도 한국의 구조개혁 의지는 퇴색해졌고, 따라서 한국경제의 앞날은 어둡다고 말했다. 유럽의 권위자인 '인터네셔널 트리뷴'지의 돈 커크 기사는 "한국정부의 기업경영 관행 개선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회복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별다른 개혁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부채만 늘려, 2003년경까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모건 스탠리 투자자문회사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지 않은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의 보다 과감한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부실기업 퇴출을 권고하였다.

다. 주변여건의 동향

최근 한국경제의 주변 여건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금년 3월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미국주식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불안감이 연일 미국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어쩌면 미국은 이제 지난 10여년간의 호황의 막을 내리고, 이제부터 불황의 터널에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우

려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최근 미국증시의 폭락을 장기간 누적된 거품이 빠지는 조정장세로 보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어제 오늘의 미국 증시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돌아가고, 이에 따라 동경과 서울의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금년 3월로 들어서면서 심화되는 일본의 경제위기감은 미국 증시의 폭락 못지 않게 심각한 우려를 우리 경제에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은행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도와 3월 결산을 마감하기 위한 조치로써 한국에 나와있는 일본 자금의 회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도 역시 한국의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일본경제가 10년간의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디플레이션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공식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 재정적자는 이미 GDP의 130%나 되어 더 이상 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이 사실상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함정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지난 3월 20일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엔화 약세정책을 용인하게 되었고, 이것은 한국의 수출시장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남북경협에 관한 한미간의 조율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지난 3월 초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하여 과거에 비하여 다소 불확실한 상태로 접어들어 가고 있어 앞으로 북한을 둘러싼 미국·중국·일본이 어떤 입장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적 변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 중의 하나이다. 디지털 경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IT산업은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대의 흑자기업이기는 하지만 그 흑자 폭이 감축할 것이 명백하다. 문제는 현대전자나 기타 전자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여건은 매우 불투명하면서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경기회복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체질 개선이다

가. 왜 체질개선이 중요한가?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경기회복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경기회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다. 만약 한국경제가 IMF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경제위기를 당한다면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물론 많은 관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회복은 성장률이나 소득수준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외형적으로 회복은 된 것처럼 보이나 몸속의 병덩어리가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 그런 회복은 반가운 일이 되지 못한다.

부도가 났던 기업이 빚을 갚고 다시 가게문을 열어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다고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다.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도를 유발한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장치의 마련과

다짐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업이 부도가 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사양길로 접어든 업종의 기업이 업종을 바꾸지 않고 다시 빛만 갚고 그 업종을 옛날과 똑 같이 되풀이한다면 제2의 부도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불량 제품을 많이 양산하는 종업원의 저급기술이 부도의 원인이었을 경우, 빛만 갚고 그 종업원의 기술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영업재개일 뿐이다.

한국경제도 마찬가지다. 미 MIT大의 돈 부시 교수는 한국경제를 한마디로 음주운전경제라고 했다. 빠리는 달리지만 음주운전은 언젠가 반드시 대형사고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대물·대인 손해배상이 해결된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을 때도 음주운전의 악습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음주운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국경제의 영업재개가 또다시 음주운전식의 영업재개라면 그렇게 반가운 일도 아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단순한 경제회복보다 우리가 더 절실히 기다리는 것은 과거의 나쁜 습관을 청산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나. 개발연대의 경제체질로는 더 이상 안된다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할 낡은 경제체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관치경제체질이다. 정부가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자금지원과 기술지원까지 해주는 소위 정부주도형 경제체질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치금융체질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와서 한국경제의 외적규모는 OECD에 가입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우리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스위스 국가경쟁력평가 전문기관인 IMD의

1997년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던 때의 평가 자료에 의하면 금융부문 등이 포함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30위로서 평가대상 47개국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그와같이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자원이 배분되어 온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 평가다.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기업신용을 평가하는 업무도 매우 취약하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외환관리기술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간부들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들의 사업타당성이나 영업전망에는 별로 흥미가 없고 정부 권력층과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해바라기처럼 위를 쳐다보는 데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영층 인사에 여러 방법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간부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그만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관치경제는 민간 대기업 경영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는 민간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 우선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 대기업 입장으로서도 금융기관의 막후 실력자인 정부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정부는 또한 조세 징수권과 세무조사라는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의 관계가 걸끄럽다거나 반정부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들에게는 세무조사라는 무기를 들이댈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 대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신상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

척에 열을 올려야 할 대기업의 간부들이 정부 고위 관료들과 친교를 맺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했으니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수동적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 접근하는 민간기업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냄으로써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민간기업들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풍토가 정착되지 못하여 상당한 거래비용을 감내하면서 기업경영을 해야 했던 것이다.

관치경제체질은 정부부문과 일반국민들 사이에도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관료들은 민간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 지역에서 기업을 하도록 유치하는 일보다는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에 더욱 익숙한 것이다. 특히 지방관청의 관료들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각종 인허가권과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리·통제의식이 더욱 심했던 것이 과거의 풍토였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내고장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다소 변화하는 분위기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경우에도 수시로 정부에 각종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문하고 나섰던 것이다. 크게는 물가관리에서부터 적게는 유사상품단속 및 화재나 도난 등 거의 모든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태도도 관치경제에 젖은 사회풍경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바람직한 경제체질은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낡은 경제체질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경제체질은 개

방·경쟁 그리고 투명을 그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개방체제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 강자가 들어 올 수 없는 폐쇄적 체제하에서의 승자는 진정한 승자가 아니다. 개방은 외부로부터 잠재적인 경쟁자를 언제든지 받아들일겠다는 가치관이다. 강자는 개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방을 하여야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그 동안 너무 폐쇄적 체제 속에 갇혀 있었다.

1)적극적 개방의식

개방이란 해외로부터의 개방도 있지만 대내적 개방도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우선 대내외적 개방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흔히 우리 경제가 개방적이지 못한 것을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이 한국의 경우는 1999년의 경우 7.8%로, 1997년에 조사된 싱가포르 81.6%, 말레이시아 38.1% 그리고 중국의 23.5%와 비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IMF경제위기 이후에는 개방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TV 토론시간에 국민에게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1998년에 조사된 KDI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의 윈야드에 있는 삼성전자(영국여왕이 회사 유치 후 기공식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함)와 한국에 있는 미국의 IBM 한국지사 중 어느 회사가 한국의 국민경제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영국의 윈야드에 있는 영국법인 회사 삼성전자가 한국의 국민경제에 더 기여한다는 국민이 56.3%나 되어 한국 IBM이 더 도움이 된다는 33.0%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어느 문방구는 명칭이 외국회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외면하여 해당 문방구는 신문·방송을 통하여 이름만 외국회사 비슷할 뿐 실체는

100% 한국회사라는 것을 선전하여 간신히 떠나는 고객의 발길을 붙잡은 옷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또한 신발 등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이름이 외국회사와 비슷하다는 한가지 이유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례도 우리의 국민 의식이 아직 개방화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2)공정한 경쟁풍토

경쟁은 능력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최상의 수단이다. 경쟁은 프로 스포츠의 핵심이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이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관치경제 체제하에서 경쟁적 풍토에 적응되지 못했다. 경쟁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은 부패를 방지하고 물의 속성을 정화시킨다.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의 핵심은 경쟁이다.

우리 민족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한다. 지난해 세계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인구를 국별로 집계한 통계를 얼마 전에 프랑스가 발표했는데, 한국의 온라인 게임 인구는 약 500만명으로 단연 세계 1위였다. 제 2위의 온라인 게임 인구를 가진 나라가 대만으로서 불과 50만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왜 한국인들은 게임을 좋아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게임의 본질은 경쟁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경쟁을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 우리의 사회체제가 비경쟁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예를 들어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하여 양반은 일하지 않아도 잘 살게 하였고, 상민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교의 장유유서라는 가치관 즉, 나이 많은 선배가 당연히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체계를 지배해 왔다. 이것은 대학교수사회나 언론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선

배들이 능력이 부족해도 당연히 사회적 주도권을 행사하였고, 신교육을 받은 후배들은 자기들의 의견개진에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전통은 경쟁제한적이며, 이는 일부 특수계층들이 특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유지해온 인위적 체제라고 생각된다.

경쟁은 차가운 효율의 논리도 아니고, 우리 동양인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서구적 가치관도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 정착시켜야 하는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인 것이다. 물론 경쟁에서 탈락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보호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에는 일정한 질서와 룰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운동에 있어 프로 스포츠가 있는 한편, 아마추어 스포츠를 병행해서 장려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3)신뢰할 수 있는 투명의식

새로운 경제체질의 형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투명이란 주로 회계자료 작성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경영의 내용은 과장이 아닌 있는 그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즉, 사실에 대한 가감없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내용이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하게 신뢰가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 경제위기 후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투명성의 결여(lack of transparency)라고 지적할 만큼 한국경제는 불투명한 경제였다.

투명성의 결여도 문화적인 것이다. 우리는 투명하지 않는 것이 편했고 그렇게 권장해왔던 면도 없지 않다. 좋으나 나쁘나는 질문에 얼버무리는 것이 예의였다. 식사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얼버무려야 했다. 내 밥값은 내가 낸

다는 더치페이 방식도 기성세대들에게는 불편했다. 계산대에서 서로 내려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해야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확실하고 투명한 것은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투명성의 결여는 미풍양속이 아니고 잘못된 형성되어 익숙해진 낡은 습관일 뿐이다. 당연히 투명하게 고쳐져야 한다. 이 경우에도 굳이 들어내서 덕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기계적으로 모두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의 원칙만큼은 우선적으로 확보한 다음 부차적 보완장치의 개발은 당연히 있어야 할 절차라는 것이다.

일찍이 한보청문회에서 회장 정태수씨는 “주인이 알지 머슴이 어떻게 아느냐”고 경영내용의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증언한 바 있었다. 그리고 기아사태, 대우사태 등등을 통하여 분식회계의 불투명성이 얼마나 당해 기업을 명들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익히 보아왔다. 물론 우리의 관행이 쉽사리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현실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경제체질개선의 핵심은 국민경제의식의 변화다

가. 지금까지의 체질개선 노력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는 유동성(달러보유를 늘리고 국내자금순환을 순조롭게 하는 일) 해결만으로는 IMF 경제위기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국내외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IMF도 1997년 구제금융약정서를 체결할 때부터 부실금융기관 퇴

출, 공기업 민영화, 자본시장의 자율성 제고 등 소위 경제체질개선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하였던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 또한 출범 초기부터 빅딜이다, 4대 부문 경제개혁이다 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힘주어 추진해 왔고,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바로 이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된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체질개선 노력은 대체로 제도개선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기업개혁

기업개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이루어졌다. 우선 기업개혁의 성과를 살펴보면, 잠재부실기업의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여신관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했고, 더불어 결합재무제표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규준이 제정·공표되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도덕적 해이 기업 및 기업주에 대해 국세청·검찰에 통보하는 등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관행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또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성급하게 기대해서도 안된다.

2)금융개혁

정부통계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은행 10개를 포함한 472개의 금융기관들이 퇴출되었다.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48%가 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떠났다. 금융정상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해 투입했고, 이의 투명관리 및

집행체제를 위해 공적자금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했다.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체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금융불안이 여전히, 관치금융의 관행이 사라지고 금융기관 스스로 기업신용평가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공공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살펴보면 우선,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포철 등 5개 기업은 이미 민영화가 완료되었고, 6개는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경제 5단체가 건의한 43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준조세 폐지의 일환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 중에 있다. 2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시켰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여러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체감수준은 극히 미약하다. 혹독한 민간부분의 구조조정에 비해 그 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는 만큼 개혁강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4) 노동개혁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고 하겠다. 또한 생산적 노사협력관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정리해고제가 이미 도입되어 법적인 장치는 일단락 되었다. 극심한 대립관계로 치닫던 우리의 노사관계도 IMF 경제위기 이후 상당히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노동쟁의 건수의 감소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만 도입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우사태 등

에서 보듯이 제도와 상관없이 노사대립 관계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노사가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소용이 없다.

이상과 같이 4대 개혁 성과를 간략히 살펴 보았듯이 개혁의 완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금년 2월말까지 추진된 개혁성과의 의미는 상시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우리 경제에 올바르게 접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입된 제도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제도 따로 관행 따로의 형식적 제도도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만약 제도 따로 관행 따로라면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제는 의식개혁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 발생 이후 우리의 경제의 개방성·경쟁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각 부문에 많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각종 제도들이 한국경제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이다.

제도라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약속이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면 자연히 의식과 관행도 그에 맞추어 바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해도 좋은 부문이 있다. 예를 들면 은행창구의 혼잡한 줄서기 문화는 순서번호를 발급하는 기계의 도입과 번호를 호출하는 창구의 제도개선으로 이제 은행에 가서 새치기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우리의 행태가 자연스럽게 바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

로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말자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여도 별로 변하지 않던 우리의 행태가, 고속도로에 속도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제도 개선이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의 교통의식수준이 높게 보이는 것은 대부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제도적 장치들이 구석구석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의 관혼상제에 관한 제도 개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표준의례준칙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의 번잡한 관혼상제 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제도 따로 관행 따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정치제도 또한 제도 따로 관행 따로 라고 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나 국회 및 정당법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손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정치행태는 매우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우는 제도의 도입이 자연스럽게 관행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인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도입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제도도입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걸들게 된다.

경제개방의 경우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방하도록 관세를 낮추고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별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수입자동차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외제자동차를 무한대로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입해도 팔리지 않는다. 이유는 수입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다소 수입차의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 한국자동차 시장은 매우 폐쇄적인 상태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166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면서도 말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경제체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4. 21세기 한국경제에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너무 쉽게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어서는 안 될 경우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살아오면서 생각과 마음을 너무 자주 바꾸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작심삼일이라고 당초의 의지와 마음을 좀 더 오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초지일관이라는 단어 역시 바뀌지 아니하는 가치관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좋은 습관과 문화는 고집스럽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쉽게 바꾸어서는 안되는 의식과 가치관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바뀌어야 할 의식과 가치관도 있다. 나쁜 음주운전 습관은 빨리 바뀔수록 좋다. 거짓말하는 습관도 빨리 버릴수록 좋다.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습관도 하루 빨리 고쳐야 할 악습 중의 하나다.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것이 많다. 이러한 나쁜 습관 또는 문화를 고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대형사고를 일으켜 큰 손실을 보거나 아주 무안하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과 문화가 과연 나쁜 것인가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것이어서 고집스럽게 지켜나

가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버려야 할 악습을 마치 지켜야 할 좋은 습관으로 착각한다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개방·경쟁 그리고 투명성이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만약 그러한 새로운 경제의식과 관행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우리 국

민들 사이에 아직은 부족하다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 작업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경제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한 채 조성되는 경기회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여 한국경제가 온탕 냉탕을 거듭하면서 오랫동안 부침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의식과 관행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德者事業之其. 未有基不固, 而棟宇堅久者.

덕은 사업의 토대이다. 토대가 튼튼하지 않고서도 그 집이 오래간 일은 이제까지 없었으니라.

- 채근담 -